

특집논문 **닐 스미스의 비판지리학과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닐 스미스(Neil Smith)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의한
청계천 복원 사업의 비판적 해석***

Critical interpretation on Cheongyecheon Restoration Project based on
concept of 'Production of nature' of Neil Smith

이상현**

이 연구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닐 스미스(Neil Smith)의 '자연의 생산(Production of nature)' 개념을 활용하여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비판적으로 해석해보았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행위자들의 전략에 의해 청계천이라는 자연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로만 다뤄짐으로써 탈정치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복원사업 추진 측의 공간 조정 전략, 거버넌스 조정 전략의 성공에 있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저항 집단의 역량 부족도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다시 정치화되려면 자연의 생산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생산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기획하는 일과, 거버넌스의 민주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요어: 자연의 생산, 환경의 탈정치화, 환경의 재정치화, 거버넌스 조정 전략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안다는 뜻이다”

— 베네딕투스 스피노자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 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551).

**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부교수(ttochi65@hs.ac.k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을 이용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환경이 자본화, 상품화되어 탈정치화(de-politicization) 방식으로 다뤄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이해방식, 거버넌스 구성과 추진방식, 기존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로만 다뤄짐으로써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되었다. 환경이 탈정치화된다는 것은 환경이 자본화되고 상품화됨으로써, 환경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한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유전자변형생물(GMOs),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비롯된 방사능 오염 문제, 해양폐기물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사막화, 식량부족과 기근 등 여러 가지 지구적, 국지적 환경문제에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류 모두의 보편적이고 당연한 과제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다(맥마이클, 2013).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경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올라와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한 결과, 오히려 환경문제는 ‘탈정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특히, 세계은행이나 IMF, WTO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 그리고 ‘북반구(the North)’ 환경주의의 주도하에 지구적 생태학(global ecology)이 나타나면서 환경문제와 사회정의, 자원분배 문제는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분리되었다(맥마이클, 2013: 330).

환경문제의 탈정치화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담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자연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다. 이 영향은 공간적 범위에서 전 지구적인 동시에, 시간상으로도 매우 길어서 지질학적 시간의 교체를 언급할 정도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대기 화학자 폴 크루첸(Paul Crutzen)은 이러한 변화를 묘사하기 위해 12,000년 전에 시작된 ‘충적세(Holocene)’를 뒤이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질학적 시대 개념을 소개하였다(Swyngedouw, 2015: 131). 기후변화처럼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환경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광범위한 동의가 존재한다. 기후변화협약이 그 증거이며, 당사국 총회를 비롯한 관련 회의들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수준에서 갈등을 빚지만 거기서 자연이나 환경문제의 역할은 실종된 지 오래다.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위협하는 위기로 등장했다가, 점차 새로운 이윤 추구의 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Smith, 2008: 243). 기후변화라는 자연은 철저하게 상품화되고, 더 나아가서 금융화되기도 했다.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고,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 시장은 지구적 규모로 거대하게 형성되었다.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드는 제지회사는 ‘딱따구리 선물(woodpecker futures)’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벌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선물(environment futures)’, 증권, 파생상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다(Smith, 2008: 248).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출되었던 “미래세대의 욕구충족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은 1992년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나 2002년의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실현가능성이 의심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달리기 시작했다(맥마이클, 2013: 329). 국제연합(UN)에서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의 후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가 2015년 9월 25일 유엔 정상회의에서 발표되었다.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할 핵심적인 개발목표 17

개가 제출되었다¹⁾(Kroll, 2015: 4~5). 경제, 사회, 환경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은 환경문제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의해 정책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하는, 정치와는 별개의 행정적인 관리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탈정치화된 환경문제가 가진 심각한 문제점은 환경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고 모두가(심지어 환경을 악화시킨 석유기업들이나 핵발전 세력 들조차도) 자신들을 녹색 혹은 환경친화적이라고 포장하거나, ‘깨끗한 대안’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Smith, 2008: 248), 환경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동시에 지리적으로도 불균등하게 분포된다는 점에 있다.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빈부격차만이 아니라 환경적 피해와 오염의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의 지구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환경문제의 탈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자연관계, 사회-생태적 시스템, 어떤 환경-자본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랭 바디유(Alain Badiou)는 환경이나 자연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동의가 확산되는 것을 현대적인 형태의 ‘인민의 아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한계를 설정하는 예전 종교의 기능을 이제 생태학이 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Swyngedouw, 2015: 132).

에릭 스윈저도우(Erik Swyngedouw)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정치불가능의 상태가 된 것에 대해, ‘후기-정치적(post-political)’, 그리고 ‘후기-민주주의적(post-democratic)’ 환경이라고 서술하였다(Swyngedouw, 2015: 138). 민주적인 토론이나 반대는 사라지고 동의와 합의만이 강제되며, 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행정이 환경정치를 대체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후기-정치적인 시대에서 환경정치는 어떻게

1) 잠정적으로 실시해본 OECD국가의 SDG 평가에서 한국은 34개국 중에서 23위를 차지했다(Kroll, 2015: 5).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탈정치화 과정을 겪으면서 후기-정치적 상황에 처한 환경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런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사회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환경파괴와 노동자-농민의 삶의 파괴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생태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떤 환경운동이 필요한가? 어떤 사회를 구성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환경/생태 이데올로기가 각축을 벌이는 환경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Dryzek & Schlosberg, 1998). 그리고 이러한 복원을 위한 이론적 지원을 널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연의 생산’ 개념에서 찾고자 한다. 뒤에 다시 상술하겠지만 자연의 생산 개념을 통해서 보면, 자연의 생산과정이 민주적이었는지, 비민주적이었는지, 정의로웠는지, 그렇지 못하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연의 생산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나 구조에 저항하여 환경을 다시 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시에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많은 논란과 사회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단 건천인 청계천에 전기로 한강물을 억지로 끌어들이 물을 흐르게 한 것에 대한 비판, 자연정화 작용을 하기 어려운 인공 어항이어서 계속 엄청난 돈을 들여 관리를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또 복원 사업 완공 후 2015년 10월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어류 집단 폐사 사고가 발생해서 2천여 마리가 폐사되었는데, 15분간 3mm의 비가 내리면 수문을 자동 개방하여 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연합뉴스》, 2015.10.11). 현재의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 다른 방식의 ‘생태적’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2마장교부터 신답철교까지 여러 종류의 수목을 식재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는 시민사회 쪽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대로 청계천 상류 지천을 복원하고, 4대 산의 물줄기를 청계천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연합뉴스》, 2015.9.27). 이 논문에서는 이명박 시장 시기의 청계천 복원 사업 과정을 자연의 생산 개념으로 재해석하면서, 주로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추진세력들의 거버넌스 전략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저항세력들의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청계천 복원사업이 점차 탈정치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환경정치의 가능성을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의 생산’ 개념에서 이론적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Smith, 2008: 249).²⁾ 인간은 특정한 자연적 필요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연은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인류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생산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자신들만의 물질적 삶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그 충족은 더 많은 생산적 활동을 요구하는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낸다”(Smith, 2008: 55).³⁾ 인간의 물질적 삶

2) 닐 스미스가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 개념의 독창성에 대해서 높이 사기는 했지만, 닐 스미스가 보기에 르페브르는 재생산 문제에 너무 경도되어 ‘공간의 생산’과 생산의 연계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 사회와 공간의 이분법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Smith, 2008: 124~125).

3) 닐 스미스의 저작 *Uneven Development*의 초판은 1984년에 나왔고, 이 논문에서 인용한 것은 2008년도에 출판된 제3판 수정본이다. 이 수정본에는 저자의 새로운 후기와 David Harvey의 서문이 추가되었다.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연이며, 이러한 자연은 인간의 의식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을 통해 통일성(unity)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자연의 통일성이나 생태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으로 회귀하겠다는 희망적 사고와는 다르다(Smith, 2008: 56). 자연은 인간 사회의 노동 분업에 의한 생산을 통해 사회와 변증법적으로 결합되어 차별적으로 분화되는데, 이러한 변증법적 관계를 널 스미스(Neil Smith)는 ‘자연의 생산(production of nature)’이라고 불렀다(Smith, 2008). 이것은 자연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거나,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사회와 자연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처음에 자연적인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잉여(surplus)’는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필연성이 되었고, 이 잉여는 계급에 기초한 사회적 분화의 기초가 되었다(Smith, 2008: 58).

“영구적인 사회적 잉여의 생산은 인간 사회로 하여금 자연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시작하게끔 하였다. ... 이것이 전반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인간 사회의 해방을 지원하였지만, 사회의 내부적 분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렇게 하였고, 인구 대부분을 노예화함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Smith, 2008: 59).

사회적 잉여가 증대되고, 시장이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의 생산은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에 복무하게 된다. 성별 노동 분업, 정신과 육체의 노동 분업 등과 같은 노동의 사회적 분업 속에서, 사회에 주어진 ‘1차 자연(first nature)’은 ‘2차 자연(secondary nature)’으로 생산된다.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 모순은 증폭된다. 즉, 2차 자연을 생산하는 과정은 자연으로부터 사회의 해방을 촉진시키는 한편, 모순도 첨예하게 만든다. 예컨대, 봉건제에서 근대적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자연의 생산과정은, 봉건적 토지제도라는 ‘2차 자연’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지배계급(지주)들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시장과 도시

의 통제에 달려있는 신흥 부르주아들 사이의 모순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다(Smith, 2008: 68). 이처럼 자연의 생산 과정은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 일어나는 과정이다(Smith, 2008: 70).

“세계적 스케일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임노동관계가 일반화되면서 자연과의 관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환가치적 관계가 되었다. 물론 사용가치적 관계는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 자본주의적 생산(자연의 전유)은 필요 일반의 충족이 아니라, 특정한 필요, 즉 이윤의 충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Smith, 2008: 77~78).

그러나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려는 욕망 때문에 자본주의적 자연의 생산은 스스로 많은 장애물을 만들게 된다.

“필요한 자원을 최소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직 이용하지도 않은 자원의 질을 하락시키며,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발전 기술과 같은 것을 개발하고, 인류를 재생산하기 위해 소비해야만 하는 모든 환경을 오염시키며, 일상생활 수준에서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Smith, 2008: 84).

닐 스미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의 생산이 단계별로(물론 역사적으로 두 개의 생산방식이 공존하기도 한다) 나뉜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자본이 자연을 ‘형식적’으로 포섭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단계로 이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⁴⁾ 그는 노동이 자본에 의해 형식적으로 포섭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포섭되는 것을 구분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빌려온다. 노동의 형식적 포섭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도 있고, 자본축적도 주로 절대적 잉여가치의 확대를 통해서

4) 이 과정은 이중적이다. 즉, 자연을 통한 자본의 순환 과정, 그리고 자본을 통한 자연의 순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Smith, 2007).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질적 포섭단계에 이르면 노동자들은 근대적인 기계장치 속에서 일종의 부속품처럼 취급받으면서 생산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본주의적 기술과 사회구조의 다차원적인 그물망 속에 던져진다. 자본축적도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위주로 바뀌게 된다. 자연의 생산도 이와 유사하다. 자연이 자본에 형식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본축적이 주로 자원의 채굴을 통해 얻어진 물질들을 생산과정에 투입시키는 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식민주의에서의 자연의 생산이 자연이 형식적 포섭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단계에서 자본은 자연을 통한 순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 포섭의 단계에서는 자연을 통한 순환을 더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산이 전 방위적으로 자본화되어, 자연의 자본화, 금융화가 일어나게 된다(스미스, 2007: 57~58).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노동자에게서 개별성을 빼앗는 것처럼, 자연의 실질적 포섭은 자연이 자본화와 금융화를 통해 자연에게서 그 구체성을 빼앗는다”(스미스, 2007: 58~59).

2008년에 수정 출간한 자신의 저서 *Uneven Development*의 제3판 후기에서 닐 스미스는 자연의 생산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그린 워싱(green washing)’ 전략을 빗대서 ‘네이처-워싱(nature-washing)’라는 개념을 제안한다(Smith, 2008: 245). ‘그린 워싱’이란 기업들이 자본주의적 이윤추구 목적으로 환경주의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처-워싱’은 이와 다른 것이다. 예컨대, 기후변화의 경우 자연이 사회적으로 변형된 것의 결과인데 이 결과가 다시 우리들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결정요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자연이, 다시 사회의 생산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네이처-워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네이처-워싱’은 자연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행위자가 사회에 대해서 막강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닐 스미스는 자신의 자연의 생산 개념이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의 입장, 즉 자연이 사회적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실재라고 보는 입장(Hajer, 1995; Eder, 1996)과는 다르다고 선

을 갖는다. ‘네이처-위상’이라는 용어를 예로 들어보면,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네이처-위상’이란 담론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담론적 구성이라는 것은 그리 멀리 나가지 못한다(Smith, 2008: 246). ‘네이처-위상’ 개념은 자연에 다시 책임을 부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지구를 탐욕스럽게 망가뜨리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기의 발생구조(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교환)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Smith, 2008: 247). 그런 면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가치적 생산관계 속에서 자연이 생산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Prudham & Heynen, 2011: 227).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어떤 이론적 이점이 있는가? 닐 스미스는 마르크스주의자나 (극단적인) 생태주의자들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가 자연을 지배(domination of nature)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히 다른 방향의 대응을 보인다고 한다. 예컨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경우 인간과 자연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자연의 지배는 피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심층생태주의자들(deep ecologist)이나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가이아 학설(Gaia Hypothesis) 지지자들은 인간의 자연 지배를 파괴적인 사회적 선택이라고 간주한다(스미스, 2007: 51).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지배론은 정치적으로는 퇴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있다(스미스, 2007: 52). 자연의 지배론이 상정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은 반사회적인 자연의 정치(생태 아나키즘)이나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지배(녹색자본주의론, 깨끗한 자본주의론⁵⁾)를 감수하는 것 정도이다(스미스, 2007: 52). 이에 반해 자연의 생산 개념은 자연을 생산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자연은 점차 실질적으로 포섭되어 새로운 축적기회

5) 녹색자본주의론이나 깨끗한 자본주의론은 닐 스미스가 제시한 것은 아니고 필자가 판단해서 삽입하였다.

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닐 스미스는 이렇게 진단한다.

“어떤 종류의 환경과 경관이 어떤 목적에서 생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선택이 폭넓은 사회적 논의에서 벗어나 시장을 통해 조율되는 협소한 계급적 통제로 넘어가고 있다. ... 점증하는 자연의 사회적 재생산은 외재적인 자연으로 인식되는 그 어떠한 것에도 침투한다. ... 그리고 일차적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이차적 자연’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일차적 자연은 이차적 자연 안에서, 또는 이차적 자연의 일부로서 생산되기 시작했다”(스미스, 2007: 54~55).

닐 스미스는, 자연이 자본의 축적 전략에 동원되면서 이제는 자연의 생산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의 소비 측면에서도 축적전략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자연식품 산업, 탄소배출권, 재활용 분야 등 자연의 소비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자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축적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반자본주의 운동으로서 자유주의적 환경주의는 죽어버렸다고 진단한다(스미스, 2007: 62). 그러면 닐 스미스는 자본의 이러한 축적전략에 대해 어떤 정치적 운동을 제시하고 있는가?

상당히 소략하고 다소 간접적이지만 그의 정치적 대안은 자연생산의 민주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예컨대, 유전자조작생물(GMO)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사용가치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의 전략적 생산 그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을 성공적으로 창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왜곡시키고, 결국 그런 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스미스, 2007: 65). 대신, 자연이 자본화 수단에 대한 투쟁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야 하고, 민주적인 자연의 생산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권력이 자연의 생산을 민주화하는데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데서 그 답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한다(스미스, 2007: 65).

필자는 닐 스미스가 비록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의 생산을 민주화하여 자본축적 전략으로 자연이 이용되는 과정에 민주주의적 요소를 투입하여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후기 정치적 상황에서 환경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자연의 생산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어떤 사회적 관계가 지배적이었는지, 중요한 행위자들은 누구였는지, 시민환경운동 단체를 비롯한 저항세력들은 민주적인 자연의 생산 과정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는지 혹은 실패하였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청계천이라는 자연의 생산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서울시장,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관련 행위자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행위자들, 청계천의 상인들(점포상, 노점상), 전문가, 시민환경운동단체들 등이 주요 행위자들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행위자들 각각의 전략에 따라 청계천이 어떤 식으로 생산되는지를 드러냄으로써, 환경정치가 왜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로 전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환경정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의 검토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논문 편수도 많은 편이다. 간략하게 주제별로 살펴보면,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연구(이진영·조택, 2006; 성지은, 2005; 황기연·나태준, 2005; 박명현, 2004; 황기연 외, 2005; 허태욱, 2004; 김종호·황필선, 2009; 김병철, 2007), 청계천 사업에 대한 도심재생 차원에서의 정책적 평가 연구(최근희, 2008; 강우원, 2003; 김진열·이규명, 2012), 청계천 사업이 가진 ‘신개발주의(neo-development)’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연구(홍성태, 2003; 2004; 조명래, 2003; 조명래·배재호, 2005) 등이 있다. 그 외에 청계천 복원이 주변 도심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장유경·황기연, 2013), 청계천 복

원이 도시계획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입장에서 성과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연구(양윤재, 2008), 청계천 공구상가의 공간구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연구(송도영, 2003) 등이 있다. 김숙진(2006)의 연구는 ANT의 입장에 입각해서 혼종물(hybrid)로서 청계천이 생산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김병욱 외(2010)는 미디어 담론과 청계천 공간의 생산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4. 자연의 생산 개념에 의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판적 해석

1) 청계천 복원사업의 개요

청계천 복원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전문가들에 의한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가 선거 국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된 것이 복원사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최초 아이디어는 2000년 9월 1일 ‘청계천 되살리기’ 심포지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 한겨레신문이 문단의 원로 박경리 선생과 대담하면서 청계천 복원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환기되었다(김병욱, 2010: 38). 당시 청계천 고가도로와 주변상가는 과거 경제 개발 시기의 상징적 공간이었다가 이제는 산업용재상이 밀집해있는 도심부적격 시설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노후해서 위협해진 고가도로를 전면적으로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김병욱 외, 2010: 35~36). 그러던 차에 아예 철거하고 복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되고, 여당 후보였던 김민석 후보는 이에 반대하

면서 청계천 복원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고가도로를 없애고 복개되었던 청계천 도로를 뜯어낸다는 것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 이라든가,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사회적, 물리적 네트워크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청계천의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원 자체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명박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뒤에는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는데, 주변 상인들(점포상, 노점상)과의 이해관계에 차이에 따른 갈등, 하천복원의 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시민위원회, 시민단체들, 전문가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조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결국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 시민위원회가 협조를 거부할 정도로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 시장 임기 내에 복원사업은 마무리 되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주요이해당사자 및 추진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청계천 생산 과정의 주요행위자들을 살펴보면 크게 여섯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 첫째, 서울시장, 둘째, 청계천 상인(점포상, 노점상), 셋째,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와 청계천 복원지원연구단(약칭하여 추진위), 넷째, 전문가집단, 다섯째,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약칭하여 시민위), 여섯째,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청계천 연대)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 등이다.⁶⁾ 이 글에서는 시기별로 청계천의 생산과정을 다루지 않고, 행위자별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생산과정에 개입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청계천 생산 과정에서 작동한 지배적 사회적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어떻

6) 추진위와 시민위는 흔히 합쳐서 청계천 복원 추진의 삼각추진시스템이라고 홍보되었다(황기연·나태준, 2005: 177~178). 그러나 시민위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청계천 복원방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나중에 시민위 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하거나 탈퇴하고 추진본부장을 형사고발하기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행위자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홍성태, 2004: 45).

< 표 1 >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과정 요약

시기	주요 이해당사자 및 추진과정
2000.9	청계천살리기연구회(청계천포럼), 제1차 청계천 살리기 심포지엄 개최
2002.4	이명박 후보, 서울시장 선거에서 청계천 복원 공약 제시
4.9~6.28	한겨레신문, ‘청계천에 생명을’ 시리즈 게재
7.2	이명박 시장, 제32대 서울시장 취임
7.2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 청계천 복원지원연구단 구성(서울시)
8.12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 결성(청계천주변 상인)
9.18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 구성(서울시)
12.31	청계천주민상인협의회 구성(청계천주변 지역주민 및 상인)
2003.2.11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서울시)
2.18	의류상가대책위원회 결성(청계천주변 의류상인)
2.22	정책협의회(10월에 청계천주변상인대책협의회로 변경) 구성(서울시)
3.	청계천노점상 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 결성(청계천주변 노점상)
4.9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
5.1	청계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안 시민위 본위원회 통과
6.9	청계천 복원공사 사업시행자 선정(서울시)
6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지지 방침 결정
6월 말	대책위와 서울시 간 이주단지규모 확대 합의(주변상인과의 갈등해소)
7.1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
7.21	시민위 역사문화분과위 청계천문화재 원형복원 서울시에 공식 요구
8.18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청계천연대) 결성(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
11.5	시민위 활동 전면중단, 청계천연대 시민위 입장지지, 원형복원 촉구
11	투쟁위와 서울시간 동대문운동장 대체 사용 합의(노점상과의 갈등해소)
12	청계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완료(서울시)
2004.2.26	시민위 역사문화분과위 및 청계천연대, 문화재청에 공사중단명령 요구
3.11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전문가위) 구성(서울시)
4.5	전문가위, 광고 이전 복원 및 복원공사 계속 추진 결정
6.14	시민위와 청계천연대, 복원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시정 앞 기자회견
8.24	문화재청 사적분과, 청계천문화재복원 소위원회 구성
9.24	소위원회, 청계천 문화재 복원방식 결정(문화재관련 갈등해소)
2005.9.30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
10.1	청계천 복원사업 준공식인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 개최(서울시)

출처: 김병철, 2007: 119에서 인용.

게 청계천 복원사업이 탈정치적인 환경관리 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자본축적을 위해 청계천이라는 자연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청계천 생산과정이 민주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청계천 생산과정에서 대립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크게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서울시장과 추진위, 일부 전문가)과 저항 집단(노점상과 점포상, 일부 전문가, 시민위, 청계천연대 등)으로 나뉘서 각 집단들이 사용한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

서울시장을 비롯한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은 청계천 복원의 의의에 대해 서울을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로 바꾸는데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양윤재 복원사업추진본부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노후된 고가구조물의 철거를 통한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그리고 청계천변 고가구조물과 주변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환경악화문제 해결과 하천복원을 통한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개로 인한 역사 및 문화유적의 멸실과 훼손을 막고, 600년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역사유적의 원형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잃고 방치된 도심에 청계천의 복원이라는 충격을 통해 정체된 서울의 도심부에 개발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부여 ...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전통적 산업기능에 IT, 국제업무, 디지털산업 등 새로운 첨단 기능, 쇼핑, 관광, 문화기능 등을 보강함으로써 국제적 중심도시로서 활력과 경쟁력이 있는 도심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양윤재, 2008: 314, 318).

이런 목적하에 청계천은 쾌적한 수변공간을 가진 도심하천으로 개발된 것이다. 물론 생태적인 하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시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200년 빈도의 제방여유고를 두었고, 서식어종을 고려한 수질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친수활동 등을 고려해 평균수심 40cm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다(양윤재, 2008: 319). 하지만 청계천은 원래 건천(乾川)이어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하천을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온 후 다시 흘러 내려 보내야 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미약해 수시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를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매년 약 80여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이데일리》, 2011.11.21).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에 비추보면 도심재개발을 위해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청계천이라는 1차 자연을 자본축적전략으로서 실질적으로 포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천으로서 청계천이 가진 원래의 생태계 기능을 활용하여 자본축적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 생태계 전체가 토지이용의 기능고도화와 도심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관계 속으로 포섭되었고, 이렇게 생산된 자본화된 2차 자연으로서의 청계천에서, 1차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 ‘흐르는 물’이 생산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포섭 전략을 통해 자본화된 청계천은 원래의 생태계가 우리에게서 은폐되어버렸다. 대신 상상속의 자연, 혹은 사회관계로부터 외재화되어 있는 자연으로서 항상 물이 흐르는 청계천이 시민들에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일종의 ‘네이처-위싱’의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⁸⁾

7)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사용한 청계천 유지관리비용은 2005년 37억, 2006년 67억, 2007년 72억, 2008년 77억, 2009년 총 74억, 2010년 77억 원이었다. 청계천 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와 청소·경비용역, 토목·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각종 시설물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하천수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 한강물과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한 해 평균 8억 원 정도에 이른다(《이데일리》, 2011.11.21).

8) 이것은 복원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2005년 10월 1일에서 3일까지 서울시에서 수

<그림 1> 청계천 복원도



출처: 양윤재, 2005.

물론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실제로 흐르는 물은 없었고, 청계천 복원도(<그림 1>)라든가, 홍보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도심공원이라는 이미지를 주입하면서 가상의 네이처-위싱 효과를 누린 것이다. 이를 통해 청계천 복원 사업 추진 집단은 시민들로부터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자본축적 전략으로 청계천을 이용하였다. 실제로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 청계천 주변의 지가는 상승하였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주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계천으로부터 1m 가까워질수록 필자는 1m²당 약 28~36만 원의 프리미엄을 가지며, 청계천 프리미엄은 청계천이 완공된 2005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9년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가 경제위기로 인해 2011년에 감소했다(장유경·황기연, 2013: 47). 이것은 청계천을 생태적 복원한 목적이 실제로 도심재개발을 통한 자본축적 전략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거버넌스 구조의 활용 전략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전략의 (추진 집단 입장에서의) 성공이 청계천 생태계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탈정치화시키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사업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응답수가 663명 중 98.6%(매우 좋다: 63.8%, 약간 좋은 편이다: 3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조명래, 2005: 140).

고, 민주적인 생산 방식을 가로막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에는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쟁점이 있었다. 크게는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복원으로 인한 교통대란의 문제, 그리고 상권의 축소와 변화로 인한 상인들의 생계문제와 보상문제, 그리고 청계천의 하천생태계와 역사문화유적의 복원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가치관 대립의 문제이다. 이 세 가지 쟁점 모두 충분히 환경정치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세 가지 쟁점 모두에서 추진 집단은 거버넌스 기제를 활용하여 갈등을 ‘관리’하였고, 갈등 관리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양윤재, 2008; 성지은, 2005; 황기연·나태준, 2005; 황기연 외, 2005).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 참여 민주주의의 성격이 나타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거버넌스 기제가 활용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계천이 자본축적 전략으로 생산되는 과정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방어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놓았지만, 실제로는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면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간 것이어서 대단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청계천이 생산되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 과정에서는 다양한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위원장 권숙표, 이하 시민위), 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이하 협의회), 청계천역사복원관련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문화재청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이 위원회 중에서 시민위는 추진집단에서 이른바 청계천 복원사업의 삼각편대(시민위, 청계천 복원추진본부, 청계천 복원지원연구단)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시민위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평가하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이며, 6개의 분과위원회(역사문화, 자연환경, 건설안전, 교통, 도시계획, 시민의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청계

천 생산과정에서 시민위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묵살되었다. 시민위는 2003년 1월 9일 본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준비한 기본계획(안) 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역사문화복원, 하천단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과정과 철거 공사 후 하천공사 중에도 구체적인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겠다는 서울시의 설명이 있었고, 시민위는 몇 가지 단서 조항을 조건부로 달아서⁹⁾ 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시민위의 의욕적인 분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분과위 활동 지원에 소극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분과위원회가 제안한 22개 사업은 대부분 진행되지 못했다(노수홍, 2004). 시민위원회의 활동위축과 비판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집단의 일정대로 계속 진행되었다. 급기야 시민위원회가 최종실시 설계안에 대한 심의결과 수용불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집단은 2003년 7월1일에 사업을 착공하였다. 명백한 조례위반이며 거버넌스 구조를 훼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한겨레》, 2004.6.13).

문화재 복원의 경우도 유사한 전략이 사용되었다. 2003년 7월 15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와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¹⁰⁾ 이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광고와 수표교의 원형을 기초로 한 복원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위 산하의 역사문화 분과위원회에서 2003년 7월 21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복원계획이 엉터리라고 선언하고 원형복원을 요구하였다. 문화재청 역시 서울시의 복원계획에 대해 반대했고, 문화재청의 자체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발굴구간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반발에 직면하자 서울시는 2004년 3월 11일, ‘전문가위’를 구성하여 문화재복원방안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전문가

9) 관련 분야 내용 추후 보완, 턴키방식공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찰안내서에 역사문화복원을 위하여 도로의 선형과 하천의 단면을 유물조사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을 조건부로 하였다(노수홍, 2004).

10) 시민단체들은 자문위원회가 서울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원회라고 하면서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거기서 결정한 내용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한겨레》, 2004.6.27).

위'는 상당히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 광고 등의 사적에 대해 일단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로 지정하여 복원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현재 교통량을 감안해 광고를 청계천 상류로 이전해서 복원하고, 수표교와 오간수문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해체·이전해서 보존하되 구체적인 복원 방침은 추후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청계천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시장이 정치적 야심을 위해 자신의 임기 내 완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문화재 전면 발굴조사 뒤에 복원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주간동아》, 2004.3.11). 그러나 서울시는 전문가위의 결정이라며 기존의 복원방침을 고수하기로 하였고, 문화재청은 광고 등을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청계천문화재 복원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결국 소위원회의 결정은 사례별 분리 복원이었다. 광고는 원형복원, 광통교는 이전복원, 오간수문은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놓은 것이다(성지은, 2005: 163).

상인들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민원을 분리해서 나누고,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사업을 추진해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협의회의 운영을 살펴보기로 하자. 협의회에서 다루는 정책 의제는 대단히 다양했는데, 보상문제, 합의안 도출, 사후 운영관리, 영업 불편 최소화, 상권 활성화, 새로운 이주지원대책 등이었다(김병철, 2007: 123). 추진 집단은 상인들을 사업 추진의 연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첫째, 상인들을 위한 교통대책,¹¹⁾ 둘째, 주변상인들의 영업 불편 최소화 대책,¹²⁾ 셋째, 주변상권활성화 대책¹³⁾ 등이다. 이처럼 뭉쳐놓으면 복잡

11) 청계천 버스노선 변경, 청계천 주변 무료셔틀버스의 운행, 청계천 상가 고객 무료주차혜택 부여 등이다.

12) 공사구간을 청계천 도로폭 이내로 한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확보하는 것, 청계천로 684면의 화물조업주차공간을 존치·활용하는 것, 공사구간을 3개 공구로 분할하고 최신공법 이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 동대문운동장을 대형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차료를 감면하는 것, 주 운행 버스노선 유지 및 3개 노

한 문제가 될 것을 잘게 나누고, 부분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의견 조율과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갈등을 관리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본축적의 ‘제도적 조정(institutional fix)’을 빗대어 ‘거버넌스 조정(governance fix)’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¹⁴⁾ 즉, 거버넌스를 이용하여 갈등을 관리하면서 결국 애초의 계획을 차질 없이 그대로, 그것도 표면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추진집단은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적 조정(spatial fix) 전략도 동원하였다. 추진 집단은 공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부적격 업소를 도시외곽에 이주시킨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¹⁵⁾ 즉, 시장자율기능에 의한 이주상가 단지를 조성, 상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입안 및 기반시설 지원, 단지조성 비용 용자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점포상을 대상으로는 아예 새로운 공간의 생산을 통해 갈등을 무마한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장소(place)’로 형성된 청계천의 사회생태계를 하나의 대체가능한 공간, 그래서 ‘장소성(placeness)’을

선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상인들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13) 건물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8억 원 무상지원, 시장현대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비 100억 원 이내 용자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금 용자 특례지원, 도심재개발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공 등이다.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은 2005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 (http://www.seoul.go.kr/2004brief/2004major/policy_det0202.htm, 2015.12.21, 검색)을 참조.
- 14) Swyngedouw(2005)는 다양한 규모의 국제조직이나 지구적 금융기구들의 출현이 국민국가 단위의 제도적 스케일을 넘어서는 제도적 조정(institutional fixes)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가진 이중적 속성과 왜곡적인 사용, 그 결과 엘리트들이 다시 거버넌스를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윈저도우의 이러한 논의를 차용하여 거버넌스 조정(governance fix)이라고 이름 붙였다.
- 15) 서울시는 2004년에 ‘문정지역 종합개발 구상안’을 확정하였는데,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약 37만 8,000여 평의 청계천 상가 이주단지를 포함해서, 미래형 업무단지, 도심형 산업단지, 동남권 유통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홍성태, 2004: 48).

상실하고 교환가능한 공간으로 치환하여 제시함으로써 상인들을 연대세력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포상들에 대한 대응 방법과 다른 대책을 제시하였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추진측 행위자들이 보기에는 노점상은 복원공사로 인해 영업상의 큰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본적으로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8월 22일 청계3가에서 공구노점을 하던 60세의 박모 씨가 노점상에 대한 과잉단속에 항의하면서 서울중구청장실 앞에서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그는 분신자살 기도 전에 이명박 시장에게 서민을 돕겠다는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2002년 9월 6일 결국 사망하였다(《오마이뉴스》, 2002.9.9). 2003년 1월 17일에는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도로 약 3,000여 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2003년 2월에는 복원사업 주변의 의류상을 중심으로 한 ‘의류상가대책위원회(이하 의류대책위)’가 결성되었고, 3월에는 노점상을 중심으로 한 ‘청계천노점상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결성되었다(성지은, 2005: 162). 2004년 4월 28일에는 청계천 4가의 공구상가에서 29년간 장사를 한 가게 주인 김모 씨가 목을 매어 자살했다(홍성태, 2004: 40). 투쟁위가 계속 대책들을 거부하고, 자살 사건과 같은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결국 협상을 시도하게 되었다.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동대문운동장을 한시적인 상설 벼룩시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책불응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성지은, 2005: 170~171). 2003년 11월 30일 서울시는 공무원, 경찰, 철거용역반을 동원해서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점상을 모두 없앴다. 하지만 노점상들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한 동대문운동장은 상설 벼룩시장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길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고 전기도 쓸 수 없는 상태였다¹⁶⁾

16) 약 1000여 명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들어오자 기존 동대문운동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은 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이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동대문운동장의 남아 있는 공간 중 3000

(홍성태, 2004: 48). 이것은 자본축적전략으로서 공간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아니면 공간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공간조정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청계천 복원 사업 저항 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

청계천 생산 과정에서 일종의 저항 세력을 형성한 집단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청계천 복원 사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 중에서 교통대란과 이로 인한 불편은 직접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다소 막연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계천 복개 이후 형성된 공구상가 등의 점포상이나 노점상과 같은 행위자들은 복원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참여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상인들은 청계천의 생태적 복원이나 역사문화적 복원보다는 오랜 기간 형성된 사회적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황기연 외, 2005: 70). 하지만, 청계천 상인들의 경우 핵심적 이해관계자로서 시민위에 들어가야 했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하기 쉬운 산하기관의 연구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복원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만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홍성태, 2004: 47). 이처럼 거버넌스 구조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한 1만 명의 노점상과 3만 명의 상인들이 활용한 전략은 유사 이해관계를 가진 16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그룹과 개별적인 협상을 벌이는 것이었다(《미디어스》, 2015.10.2). 상인들은 자본축적 전략으

평을 노점 상인들에게 할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주변 노점상들도 동의하고 협조하여 청계천 주변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계천에서 이주했던 상인들은 옛 동대문구청 옆 옛 승인여고 자리로 약 850명 정도가 다시 이전을 하게 되었다(《오마이뉴스》, 2009.10.16).

로서 청계천을 자본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조 환경 속에서 누렸던 상권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생산과정을 민주화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런 점은 추진집단에 의해서도 지적된다. 추진집단의 협상전략을 살펴 보면, 협상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결집력이 약하고 개인적 불이익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상인을 협상파트너로 설정”한다는 전략이 나와 있다(황기연·나태준, 2005: 181). 사업 초기에 서울시의 이 전계획에 회의적이었던 상인들은 서울시가 개별 이전이 아닌 상권 전체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는 추진 집단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었다.¹⁷⁾

한편, 서울시가 제시한 복원 사업의 착공 시기는 참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시는 2003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7월 착공이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시민위에서 착공 시기 연기를 요구하였다(황기연 외, 2005: 68). 착공시기의 문제는 청계천 생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7월 1일 착공이라는 시간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표였다. 즉, 이명박 시장의 재임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굳이 서둘러 7월에 착공을 할 필요는 없었다.¹⁸⁾ 만일 착공이 연기되고, 복원 사업의 생태적 건전성, 문화유적의 보전, 상인들(점포상, 노점상)의 상권과 생계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문제 등을 광범위

17)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면 상인들은 자신들의 협조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문정동에 만들어진 가든파이브로 이전을 꿈꿨던 6천여 상인들 중에 실제로 가든파이브 상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상인은 2천여 명이고,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다(《미디어스》, 2015.10.2).

18) 청계천 복원 연기가 불가하다는 주장의 핵심 논리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실천력이 약화된다”, “연기되면 돌발변수에 의해서 사업이 좌초된다”, “선거과정에서 정치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말린다”,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대되고, 관심에서 멀어진다 등이다(황기연 외, 2005: 69). 이 점을 살펴보면, 복원사업을 탈정치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면, 청계천 생산의 과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뀌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민주적인 청계천 생산을 위해서 착공 시점을 언제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앞서 보았듯이 상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노점상의 경우 합법성을 갖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버린 상태였다.

따라서 착공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시민위에 있었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거버넌스 조정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그럴 가능성을 살리지 못했다. 우선 시민위가 조례에 의한 기구이긴 하지만, 결국 서울시 산하의 위원회였기 때문에, 시장 임기 내에 완공을 해야 한다는 시정부의 정책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청계천 복원을 일종의 토목공사로만 인식하는 추진집단에 의해 시민위에서 시민사회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려웠다(조명래·배재호, 2005: 145).

11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청계천연대는 청계천의 문화재를 전면적으로 발굴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한 뒤에 하천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추진집단은 문화재 복원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하천 공사는 홍수를 막기 위해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시민사회의 주장을 무시했다(《주간동아》, 2004.3.11).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며, 논리적이지도 않다. 사업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위원회 건설안전분과의 정동양 교수는 2002년 12월부터 홍수문제 없이 광교와 수표교를 원위치, 원형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노수홍, 2004). 청계천에는 상당한 문화재가 존재하였다. 다양한 유구(遺構), 모전교 주변의 양안 석축, 수표교 기초석, 오간수문지(五間水門址) 등이 발견되었는데, 조선후기의 토목기술 변천이나 경제력을 보여주는 문화재들이다(《주간동아》, 2004.3.11). 그러나 홍수 방지를 위해 급하게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교동 네거리

옛 모전교 주변 공사 현장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좋았던 호안석축 48미터를 훼손하였다(《조선일보》, 2004.3.2).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김영주 시민위 위 역사문화분과장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등 5명은 2004년 3월 5일 이명박 시장과 양운재 본부장을 문화재 훼손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청계천연대와 시민위는 “서울시가 법적 기구인 시민위가 반대한 청계천 복원사업 최종 실시 설계를 그대로 추진하는 등 청계천 파괴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였다(《한겨레》, 2004.6.13). 결국 거버넌스 기구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집단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제동을 거는 방법을 택하여 거버넌스 조정 전략에 대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한다는 것이 저절로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4년 7월 21일 녹색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노당 소속 서울시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적을 하였다.

“위원회가 얼마나 시민들을 대표하는가, 청계천 시민위의 경우 독립성, 자율성을 조례로 보장하여 위상을 높였으나, 활동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결국 서울시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이후 서울시 행정에서 시민참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녹색연합, 2004).

즉, 거버넌스 기구의 시민대표성, 그리고 실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활동의 내용과 제도적 보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의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저항집단의 청계천 생산 전략은 점포상처럼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부

분적 참여로 그치거나, 시민위와 같이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였더라도 거버넌스 구조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좌초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법률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도심재개발을 통한 자본 축적 전략으로 청계천이 생산되는 과정에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적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나, 축적전략으로 청계천이 생산되는 과정을 차단시키거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고, 거버넌스 조정전략에 의해 포섭되어 버린 것이다.

청계천 생산 과정에서 저항집단, 특히 시민위나 청계천연대는 청계천의 사용가치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청계천이 가지는 원래의 생태계 복원과 문화유산의 복원에 집중하여 대항 전략을 구사하였다. 물론 저항 집단에서 청계천이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그리고 도심재개발을 위한 도심하천개발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의 청계천 생산방식을 주도하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청계천이 자본화되는 방식에 집중하여 이것을 공략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는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도심을 관통하는 깨끗한 물이라는 이미지가 가진 네이처-위싱 효과를 차단하였다면, 적어도 공사 착공시기를 연기하고, 문화재 복원 조사를 위한 시간을 벌면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민주적 방식의 청계천 생산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해석의 결과와 환경정치의 가능성

지금까지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산 개념을 기초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비판적으로 해석해보았다. 복원사업의 추진집단들은 저항집단들을 대상으로 ‘공간적 조정 전략’과 ‘거버넌스 조정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목표했던 기간 동안에 복원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즉, 공간적 조정 전략과 거버넌스 조정 전략을 통해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자본 축적 전략으로 청계천이라는 자연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과정

은 형식적으로는 거버넌스 구조라는 민주적 방식을 활용했지만 매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청계천 생산 과정에 비판적으로 개입했던 저항그룹들은 청계천의 비민주적 생산 방식이 청계천 주변의 지가를 올림으로써 자본화되고 상품화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닐 스미스(Neil Smith)는 예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우리(환경운동가들, 마르크스주의자들, 여성주의자들, 작업장 안전 및 보건운동가들, 과학비평가들, 인종과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사회이론가들 - 필자 첨부)는 자연을 분명하고도 불가피한 대중적인 정치 의제로 올려 놓음으로써 주요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우리는 동시에 자연의 정치학이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제도화되고, 시장화되면서 보통의 정치적 의제로 되면서 주요한 패배도 맛보았다. ... 후기 자본주의의 자연 파괴에 대한 환경주의자들의 도전이라는 급진적 지니(genie,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요정-필자 첨부)는 자연에 대한 새천년적(millennial) 조바심을 잠재우기 위해 제도적 정상성이라는 병속에 다시 갇히게 되었다”(Smith, 1998: 272).

환경과 녹색의 이미지가 상품화되고,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과 역사성과는 상관없는 하천복원사업이 추진되었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정치의 가능성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시사점은 자연의 상품화 과정에 다양한 차원으로(예컨대, 물질적 실천, 상징적 실천 등)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Swyngedouw, 1999; 2005). 거버넌스라는 것은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세력 혹은 역량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종의 국면 돌파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거버넌스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급진화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상품화에 저항하여 인간의 자유, 그리고 자연의 공공성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급진화시키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의 자연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연 생산 과정에 개입하여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상징적 실천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가 비민주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연 생산 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기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생산 과정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시민운동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하고, 담론과 상징의 효과적인 활용 전략 등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청계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된 지 이제 만 10년이 되었다. 도심하천공원의 조성, 그리고 주변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부동산 수익의 증가라는 목표에 비추어보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러나 생태적 복원, 그리고 역사성의 복원이라는 목표에 비추어보면 청계천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조명래·배재호, 2005). 그리고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생태적 측면이 강조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서 청계천이라는 자연의 생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다. 앞으로 진행될 청계천이라는 자연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출신의 시장이 마련하는(예전보다는 민주적이라고 간주되는) 거버넌스 구조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자연 생산 과정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담론 및 이데올로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흐르는 물이 가진 네이처-위싱을 효과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운동 전략을 수립하며, 공공의 자산으로서의 청계천이 가지는 가치를 가치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행위자들이 그 과정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그 결과 청계천에는 인공적으로 퍼 올린 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이 흘러야 하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적 가치가 그 물에 실려서 흘러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 2015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17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12월 23일

❖ Abstract

Critical interpretation on Cheongyecheon Restoration Project
based on concept of ‘Production of nature’ of Neil Smith

Sanghun Lee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 the process of ‘Cheongyecheon Restoration Project’ in critical manner using the concept of ‘production of nature’ of Neil Smith. Through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Cheongyecheon creek by various actors and social networks, environmental problem has been de-politicized as technologic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task. This paper interprets the strategies of spatial fix and governance fix of pursuing groups and lack of effective strategy from resistance group contributed to the de-politicization of the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suggests we need democratizing production of nature. For this, planning of critical involvement into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nature and strategical consideration of democratic engagement into the governance is highly recommended.

Keywords: production of nature, de-politicization of environment, re-politicization of environment, governance fix strategy

참고문헌

- 강우원. 2003. 「도시재생으로서의 청계천 복원 의의와 문제점」.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3쪽.
- 김병욱·엄정운·김승현. 2010. 「청계천 공간의 변화와 시기별 미디어 담론 변화에 대한 일 사례 고찰: 조선일보의 1960년대, 1980년대, 2005년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1, 26~46쪽.
- 김병철. 2007.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도시유형론적 분석」. 《국토연구》 2007.6, 111~129쪽.
- 김숙진. 2006. 「생태 환경 공간의 생산과 그 혼종성(hybridity)에 대한 분석: 청계천 복원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2), 113~124쪽.
- 김종호·황필선. 2009. 「거버넌스 환경에서의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예방적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7(1), 41~65쪽.
- 김진열·이규명. 2012. 「도시재생으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거버넌스 형태와 특수성 사례연구」. 도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노수홍. 2004.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의 활동과 문제점」. 청계천연대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발표문(2004.6.9).
- 녹색연합. 2004. 「청계천 복원사업의 평가와 지속가능성 실현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 닐 스미스. 2007. 「축적전략으로서의 자연」. 페니치, 레이스 편, 허남혁 외 역. 『자연과 타협하기』, 필맥, 39~66쪽.
- 박명현. 2004.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상인집단간의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 성지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 분석」.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5(4), 155~177쪽.
- 송도영. 2003. 「청계천 공구상가의 공간구조와 사회적 성격」. 《환경사회학연구 EC O》 통권 4호, 166~190쪽.
- 양운재. 2005. 「청계천 복원,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과제」.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http://unep.or.kr/sub/sub05_01.php?mNum=5&sNum=1&boardid=planet&mode=view&idx=139 (2015년 10월 21일 검색).
- _____. 2008. 「도시재생 전환기제로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4), 307~328쪽.
- 이진영·조 택. 2006.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논총》 16권, 49~104

쪽.

장유경·황기연. 2013. 「청계천 복원에 따른 지가 영향」. 《국토계획》 48(3), 41~51

쪽.

조명래. 2003. 「청계천의 재자연화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4호, 130~165쪽.

조명래·배재호. 2005.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한계」. 《대한토목학회지》 53(11), 140~155쪽.

최근희. 2008.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정책과 영국 런던 도클랜드 재개발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21(3), 291~313쪽.

필립 맥마이클 지음. 조효제 옮김. 2013.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허태욱. 2004. 「도시거버넌스와 갈등에 관한 연구: 청계천 복원사업을 사례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성태. 2003. 「청계천의 공간문화: 파괴, 정체, 그리고 희망」.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4호, 211~230쪽.

_____. 2004. 「청계천 복원사업과 청계천의 파괴: 이명박 시장의 신개발주의와 이익의 정치」. 《경제와 사회》 63, 39~65쪽.

황기연·김종한·박민진. 2005.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갈등과 합의형성: 청계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6(2), 57~78쪽.

황기연·나태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도시연구》 6(4), 169~190쪽.

Dryzek, J. & D. Schlosberg, (eds) 1998, *Debating the Earth: The environmental Politics Rea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der, K. 1996. *The Social Construction of Nature: A Sociology of Ecological Enlightenment*. London: Sage Publications.

Hajer, M. A. 1995. *The Politics of Environmental Discourse: A Study of the Acid Rain Controversy in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Oxford: Clarendon.

Kroll, C.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the rich countries ready?*. Gütersloh: Beertelsmann Stiftung.

Prudham, S. & N. Heynen. 2011. "Uneven Development 25 Years On: Space, Nature and the Geographies of Capitalism." *New Political Economy*, 16(2), pp. 223~232.

Smith, N. 1998. "Nature at the millennium: Production and re-enchantment." in B. Braun & N. Castree (eds). *Remaking Reality*(pp. 271~286), London: Routledge

_____. 2008.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3rd Edition). Athens and London: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Swyngedouw, E. 1999. "Governance Innovation and the Citizen: The Janus Face of Governance-beyond-the-State." *Urban Studies*, 42(11), pp. 1991~2006.
- Swyngedouw, E. 1999. "Modernity and Hybridity: Nature, Regeneracionismo, and the Production of the Spanish Waterscape, 1890~1930."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9(3), pp. 443~465.
- _____. 2015. "Depoliticized environments and the promises of the Anthropocene." in Raymond L. Bryant, 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Political Ecology*.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Co., pp. 131~145.
- 《미디어스》. 2015.10.2. "청계천 복원,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김상철의 다른 서울] 청계천 복원 10년을 되돌아본다.
- 《연합뉴스》. 2015.9.27. "'도심 명소' vs '운영비 폭탄' ... 청계천 복원 10년 명암"
- _____. 2015.10.11. "청계천 복원 후 6차례 물고기 떼죽음 ... 2천여 마리 폐사."
- 《오마이뉴스》. 2002.9.9. "생계형 노점 과일단속은 저항 부를 것. 단속은 적법 공무 집행, 청계천과 무관."
- _____. 2009.10.16.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대문운동장 노점상들, 영업기간 5년 이상 약속 파기 당하고 강제철거 당하는 노점상특화거리."
- _____. 2008.10.14. "청계천, 방문객 수↓ 유지관리비↑ ... 왜?"
- 《이데일리》. 2011.11.21. "청계천 물길 따라 해마다 80억 원 증발."
- 《조선일보》. 2004.3.2. "청계천 호안석축 훼손됐다. 복원공사로 48m 소멸."
- 《주간동아》. 2004.3.11. "청계천 물길 역사 그리 하찮은가, 시민단체 문화재 전면 발굴 후 복원 요구 ... 무리한 공사 강행 재고 충분한 논의를."
- 《한겨레》. 2004.6.13. "시민단체, 청계천 복원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 _____. 2004.6.27. "호안석축 제자리 복원 목살."